

행정부

문 1.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.
- ②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 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.
- ③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.
- ④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는 부당에 해당한다.
- ⑤ 부관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.

문 2.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
- ② 행정상 계약
- ③ 행정계획의 변경
- ④ 공법상 계약
-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당

문 3.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.
- ②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.
- ③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.
- ④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,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.
- ⑤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.

문 4. 다음 중 행정벌의 과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.

-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.
- ③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·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.
-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시 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.
-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,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문 5.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.
-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과라고 하고,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·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과라고도 한다.
-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
- ④ 집중효과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·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판례에 따르면 인·허가의제시에는 주된 인·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.

문 6.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판례에 따르면, 공법상 계약도 감독청의 승인과 인가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이 적용된다고 본다.
- ② 공법상 계약 중에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.
- ③ 공법상 계약에서 사인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.
- ④ 공법상 계약도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.
- ⑤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사무의 위탁 등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문 7. 다음 중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의견제출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호된다.
-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.
-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-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